미르 의혹 '전경련 해체' 탄력 받을까

이재용 부회장 "전경련에 내는 기부금 출연 중단하겠다"
우상호 "재벌 정경유착 해결 의지 없어… 해체 추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체 수순을 밟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후 전경련 활동을 중단하고 기부금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이 "삼성은 전경련의 가장 큰 회원사다. 전경련 해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다른 회원사 그룹들의 동참이 줄을 이을지 주목된다.

삼성이 전경련의 핵심 회원사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전경련 활동 중단 선언은 전경련의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전경련에 내는 기부금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하태경 의원이 "(전경련에 내는) 기부금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하라"는 질문에 "그러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삼성 그룹은 재벌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장 많은 회원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경련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제인 단체다. 그동안 전경련은 친재벌적인 경제·노동 정책을 제안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어긋난 행보를 걷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전경련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정경 유착의 통로', '정권의 모금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해체 요구가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의혹에 이어 '최순실 사태'의 출발점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강제모금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결정타였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재단 설립 자금 모금이 자발적이었다고 말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을 뒤집은 바 있다.

전경련 내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전경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적 쇄신을 하는 등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조직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을 해체할 수 있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이때까지 불미스런 일에 관계 돼 있다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해체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재벌이 정경유착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 전경련 해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순실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재벌총수들이 일제히 출석한 데 대해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지금 상황만 모면하자는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검찰 기소를 피하겠다는 목표만 있는 것인지 실망스럽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전에 국정조사 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과 지켜봤지만, 예상한대로 재벌총수들의 대답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는 잘 몰랐다'로 일관해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협조한 것도 협조"라며 "적극적인 대가나 이익을 기대하며 금품을 건넨 것은 적극적인 대가, 금품을 받는 것은 적극적인 뇌물이 된다"며 "총수들이 대통령을 독대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오갔고, 민원이 오갔고, 민원의 일부가 해결됐다는 게 명백한데 오늘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데에 급급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전경련이 해체돼야 한다고 본다"며 "저는 결심했다. 전경련 해체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에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해달라고 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전경련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경유착의 도구로 이용 당하는 조직은 더이상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정운천 탄핵찬성은 울며 겨자 먹기"

전날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촛불 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전북시국회의는 6일 정 의원의 탄핵 찬성 입장을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정하고 새누리당과 함께 퇴장할 것을 명했다.

이날 전북시국회의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이 공범 행위를 가리지는 못한다. 정운천 의원은 석고대죄 그만 하고 새누리당과 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시국회의는 "새누리당은 불법 '박근혜 게이트'에 협조하고 헌정 질서 파괴를 지원한 부역집단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초선의원의 결의문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전북시국회의는 탄핵 찬성 입장에 상관없이 이날부터 사흘 간 전주에 있는 정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에서 타오른 2만개의 촛불 민심을 똑똑히 봤다"며 "즉각 탄핵이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 생각하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을 포함해 당의 제재를 받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전북도민의 뜻에 같이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황현 도의장,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

"자선냄비에 훈훈한 사랑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의 손길이 올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6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한옥마을.

빨간 외투를 입고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활동에 나선 황현 도의회의장이 길 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딸랑 딸랑~' 금색종을 힘차게 흔들면서 목청을 높였다.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1만원 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빨간 자선냄비에 넣었다.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갈수록 자선냄비를 향한 온정의 손길도 조금씩 더해져 갔다.

엄마의 손을 잡고 천원짜리 지폐를 넣는 어린 자매부터 한옥마을에 놀러온 20대 젊은 연인까지 금액은 각각 달랐지만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한결같았다.

황 의장은 정성을 보태준 시민들에게 일일이 "자선냄비에 온정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하세요"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황현 의장은 "올해도 많은 분들이 훈훈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빨간 외투를 입고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활동에 나선 황현 도의회의장이 길 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딸랑 딸랑~' 금색종을 힘차게 흔들면서 목청을 높였다.

조배숙,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등 4건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폐쇄적이므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한편,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은 김종회, 김광수, 김수민, 김삼화, 정인화, 유성엽, 이용호, 김관영, 정동영, 장정숙, 최도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